

‘경제 관계 개선’ 중국·일본, ‘전투기 근접 비행’ 신경전

중 “방공식별구역내 대응 정당”...일 “우발적 충돌 우려” 재발 방지 요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 등으로 경제 분야에서 관계 개선이 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일본 정찰기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근접 정찰과 이에 맞선 중국 전투기의 초근접 감시비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장병 대변인은 전날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근접 정찰을 했다”면서 중국 전투기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법에 따라 수색·식별·추적·감시했으며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규범에 맞았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의 군함과 항공기가 중국을 근접 정찰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중일 해

양·공중 안보 위협의 근원”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가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원서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부근에서 먼저 근접 정찰을 한 것은 일본 측이라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 측 반응은 지난 10일 일본 측 발표와는 크게 다르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중국 JH-7 전투폭격기가 지난 9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를 하던 일본 항공자위대의 YS-11 정보수집기에 수평 거리로는 약 30m까지, 수직 거리로는 약 60m까지 접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0일에도 JH-7 전폭기가 YS-11 정보수집기에 반복적으로 근접 비행했다고 일본 NHK는 전했

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중일 양국은 지난달 7~8일에도 중국 전투기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의 이동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중일 간 군사적 신경전은 최근 경제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1년 10개월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지난달 결정된 바 있다.

중국은 또 최근 일본의 요구에 응해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필요한 ‘동물위생검역 협정’ 발효를 위해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국은 2019년 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연합뉴스

“북, 리에 3만 추가 파병·합동훈련 예상”

우크라 “북·러 협력으로 북한군 현대화...한·미·일에 큰 위협”

북한이 러시아에 수개월 내 3만명 이상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오는 9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보고서를 입수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는 평양을 방문 후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11군단 소속으로 최소 4개 여단 9500여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인हे전술 공격에 투입됐으며 파병

군 가운데 4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들은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법, 자체 드론 활용법 등을 빠르게 습득했고 전장에서 얻은 교훈은 본국에도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 자파드 훈련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준비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키이우 탈환 시도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산복합체를 증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150만발의 포탄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200만발의 포탄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가자 시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병원에서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자 강제이주 구상은 인종청소” 비판 확산

국방장관 ‘인도주의 도시’ 지시...‘주민 보호’ vs ‘반인권 범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구상을 두고 “인종청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그것은 강제수용소”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곳으로 강제이주된다면, 이는 인종청소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남쪽의 중심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군에 지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60만명을 이주시킨 뒤 최종적으로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것으로,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말고는 마음대로 떠날 수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그들이 만약 가자 지구의 절반 이상을 ‘청소’(clean)하려고 수용소를 짓는다면,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방하고 밀어내고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2009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올메르트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침공 직후엔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무고한 민간인이 살상

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규탄해왔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분노를 모두 반유대주의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인도주의 도시’ 구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찬반 세력 간 논란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의 인권 변호사와 학자들은 이 구상을 ‘반(反)인권 범죄의 청사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강제수용소’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찬성론자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방침을 나치 독일 당시의 강제수용소에 비교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연합뉴스

트럼프 ‘파월 해임’ 근거 찾기 분주

백악관, 파월 의장 금리 결정 비난 이어 “연준 건물 공사비 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쫓아내기 위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이뤄진 연준 건물 건설의 과다 비용 문제를 거둬 제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케트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연준 보수 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느냐의 여부는 러셀 보우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가 연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시 위원장은 연준 건물 공사가 미국 역사상 연방수사국 청사 보수 공사 다음으로 가장 비쌌다면서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해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약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보우트 국장의 서한과 해시 위원장의 인터뷰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근거를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 공사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우트 국장은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기간 본부 건물 보수 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파월 의장에게 보냈다.

연준이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나 들었다는 게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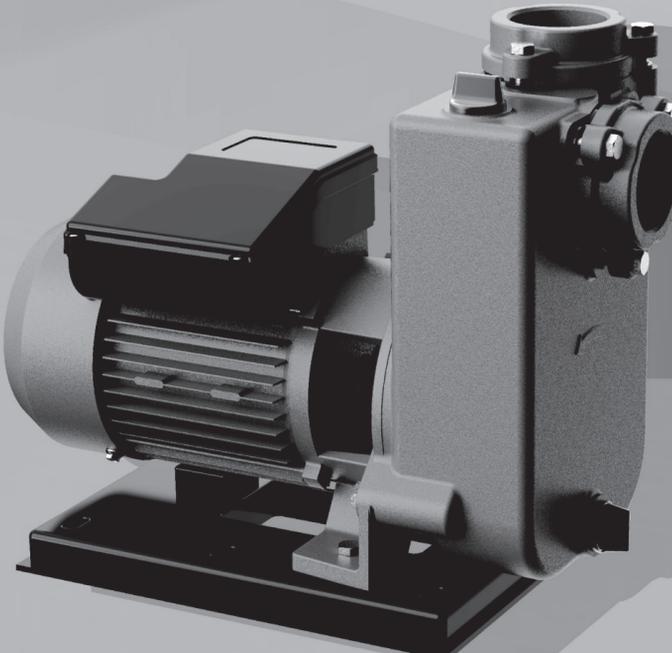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보우트 국장은 연준에 답변 시한으로 업무일 기준 7일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조치를 시도할 시간을 준다고 약시오스는 관측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거듭 비난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의식해 해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도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해왔다.

NYT는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금리 결정을 비난한 데 이어서 건물 보수 비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격을 전개하면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준은 공격이 계속되자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보수 공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란을 만들어 공사 비용 증가 사유 등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